

“북핵문제 정상회담 의제로는 적절치 않아”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인터뷰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광주일보는 대북 특사로 파견되는 등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을 만나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과 북한 핵 문제, 남북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인터뷰했다.

김대중 도서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했던 임 전 장관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의해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돼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인터뷰는 김대중 도서관 1층에서 14일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이뤄졌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1934년 평북 출생 ▲육사, 서울대 졸업 ▲육군 소장 예편 ▲나이저리아, 호주 대사 ▲통일부 장관, 국경원장 ▲현 세종재단 이사장

강력 반발했으나 남북관계도 경색됐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 내가 다시 특사로 북한을 방문, 북한 지도부를 5시간이나 설득한 끝에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원상회복시켰다. 이러한 상황에도 미국은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언급하는가 하면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자국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했다.

북한도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NPT(핵 비확산조약) 탈퇴 수순을 밟으면서 결국 핵 실험까지 나가게 됐다. 이처럼 북미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실험은 부시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인가.

▲그렇다. 북한이 핵 실험을 들고 나오기까지 지난 6년동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기존의 강경책에서 대화와 협상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고 긍정적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중용하고 있으며 북한도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에 최대한 호기며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뤄야 한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된다면 북한은 핵을 유지할 이유가 상당부분 해소된다.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8월 15일까지는 이뤄져야

회담 의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 북핵, 북미 관계 정상화가 관건 한반도 현실 감안 포용정책 유효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남북 양측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점과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시한의 문제를 떠나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정례화돼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8·15 남북정상회담을 강조한 것은 8월 이후에는 대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담 개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상당부분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그렇지 않다. 북한 핵 문제와 남북정상회담은 분리돼야 된다. 남한이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다 북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의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며 6자회담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이 다뤄져야 한다.

—차기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포용정책, 즉 햇볕정책이 유효하다고 본다. 어떠한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 포용정책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법적인 국가통일이 앞서서 서로 오가며 돕는 사실상의 통일 사업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이며 이는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임동원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도체육회 부회장직 폐지 마땅



최재호

체육부 차장

지난 4월 26일 전남도민 체전 기간 중 발생한 전남 체육회 간부 살해사건과 관련, 최근 박병열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새로 수립될 전남도의 체육회 조직체계 정비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는 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검증

을 거쳐 새 조직체계 등 쇄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새 방안을 쉽사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외로 쉽다. 체육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후 전남 체육인들은 한결같이 체육회 조직체계의 구조적 모순, 즉 상임부회장-사무처장의 ‘육상육’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체육인들은 또 상임부회장직이 퇴임 행정관료들이나 지역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용’으로 잘못 이용되어 온데다, 그러다 보니 체육 문화인들이 전남체육 정책을 집행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소연한다.

체육인들은 역대 몇몇 상임부회장의 경우 아마추어 체육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횡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체육인들을 자신의 사조직처럼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역대 도체육회 집행부를 보면 이처럼 전횡을 일삼는 부회장과 전문체육인 사무처장이 노골적으로 반목하는 바람에 전남체육이 풍파에 시달린 적도 많았다.

급기야 전남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전무이사들과 회장단은 지난달 잇달아 모임을 갖고 상임부회장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체육회장인 전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그렇다면 전남도의 체육회 조직체결 관련 골자는 상임부회장직 폐지다. 그럴 필요도 없지만, 꼭 상임부회장직을 유지시키고 싶다면 현재 연간 5천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경기단체 예산으로 돌리고 부회장직을 명예직으로 존속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남도체육회의 위상을 위해 상임부회장직은 존치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경기단체 수와 예산이 가장 많고 전국체전만 열리면 1위를 놓치지 않는 경기도, 또 매년 체전 3위권을 유지하는 강원도 체육회에는 상임부회장직이 없다는 대목에 이르면 그말은 설득력이 없다.

체육계 원로들은 전남도가 이번 비극적인 칼부림 살인사건을 겪은 뒤에도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직이 계속 존재한다면 전남체육계는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 체육회가 환골탈태해 선진 전남체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남도 체육수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

/lion@kwangju.co.kr

7년전 급박했던 상황 기억 생생 금수산 참배 결론 못낸 채 회담 회담 대가로 단 한푼 지원 안해

—다른 난관은 없었다.

▲북한은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에 적대적인 보도를 많이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태도를 취했다.

결국, 북측이 일단 취재진이 평양에 들어온 이후 협의하자며 한발 물러섰으며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의 취재 제한 조치는 없었다.

—참여정부의 대북송금특검에 대한 입장은.

▲재판 결과가 다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북한에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대북경제협력에 추진했던 대기업들이 리베이트 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마치 정부가 금전을 제공한 것처럼 떠들었는데 결국 모든 것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

특히, 대북송금특검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쌓아온 남북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점은 참여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결과적으로 대북송금특검은 참여정부 초반, 남북관계의 진전에 악영향을 끼쳤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 실험이라는 초강경책을 들고 나왔는데.

▲북한은 냉전체제가 종식되자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북한은 북미 제네바 합의를 근거로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경수로를 받아들이는 등 나름대로 전환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 시절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발전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종반으로 접어들던 시점에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대북 강경정책 드라이브를 걸자 북한이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아래에 명기된 곳은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란!

현재 광주시 개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본란에 나와있는 19곳 뿐입니다. 모두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이며 의사면허증 획득후 1년의 인턴생활과 대학병원급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시험에 합격하여 4년간의 성형외과 수련의 과정을 마친후 1·2·3차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의 올바른 구별 방법

1. 선택한 병원 상호를 정확히 확인
 - 성형외과 전문의인 경우 → ○○○성형외과, ○○○성형외과의원
 -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2. 병원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확인
3.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나 대한성형외과학회에 확인

(02)3472-4243 www.cosmeticsurgery.or.kr
(02)3472-4252 www.plasticsurgery.or.kr



- 교 토 성형외과 ☎ 223-7000
무등빌딩(삼복서점) 옆
- 권대승 성형외과 ☎ 224-6663
충파 맞은편 3층
- 김영길 성형외과 ☎ 227-3777
무등극장앞
- 김용직 성형외과 ☎ 384-7771
상무지구 BYC빌딩 3층

- 김환익 성형외과 ☎ 225-9777
밀리오레건너편, 광주은행 3층
- 류봉수 성형외과 ☎ 234-0009
충청로 1가입구 광일빌딩
- 서현메카 성형외과 ☎ 232-3600
전대병원 응급실 맞은편, 그랜드호텔
- 메디필 성형외과 ☎ 352-5252
농성동 신세계건너편, 메디필센터 2층

- 박동균 성형외과 ☎ 236-3300
충장로 1가입구 3층
- 벨 라 성형외과 ☎ 224-7300
남동 성당옆 웰크리닉 3층
- 신지호 성형외과 ☎ 222-0222
충장로 1가입구 건너편 광일B/D 2층
- 세 련 성형외과 ☎ 616-6100
충장로4가 밀리오레 9층

- 신세계 성형외과 ☎ 351-1114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밝은안과 건물 3층
- 오형근 성형외과 ☎ 366-0003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 아 델 성형외과 ☎ 232-2046
충장로1가입구 3층 227-2046
- SM美 성형외과 ☎ 376-4114
서구 치평동 상무타워 2층

- 최광림 성형외과 ☎ 226-8575
밀리오레 건너편 TTL 건물 3층
- 허우회 성형외과 ☎ 223-9595
전대병원 오거리
- 최석현 성형외과 ☎ 224-9900
그랜드호텔앞 전변쪽